

2000년 총선은 정치개혁의 시작이다

2000총선 안양시민연대 발족 선언문

지금, 세상은 새로운 시대를 맞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정치권은 여전히 당리당략에 빠져 부끄러운 이전투구를 반복하고 있다. 2000년 첫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그들만의 총선을 향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으나 시대착오적인 구정치를 보는 유권자의 눈은 냉랭하기 그지없다.

이제 정치권의 개혁을 정치권에게 맡겨둘 까닭이 없다. 해를 넘긴 채 어느 것 하나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여야의 정치개혁 협상과정을 보라. 새로운 비전과 국정수행의 능력을 상실한 부패무능 정치인들에게 이대로 정치를 맡겨두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그르치고 심지어 우리 후손들의 미래마저 발목잡는 일이다.

부패무능불성실 의원에 대한 유권자심판운동은 4년에 한 번 주어지는 선택의 기회를 맞아 우리 유권자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우리는 오늘 이 땅의 정치현실에서 시민단체의 존립근거가 부패무능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의지를 앞장서서 대변하는데 있음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 오늘, 2000총선 안양시민연대의 발족에 절대다수의 유권자들이 보여주는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유권자의 눈과 귀를 막고 손과 발을 얽매어 놓은 현 선거제도와 관행이 지속되는 한 유권자를 소외시키는 정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진정한 유권자 선거혁명을 위해서는 정당한 유권자 권리의 행사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낡은 선거관부터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의 운동은 낡은 정치에 대한 심판운동이자 낡은 정치제도에 대한 철폐운동이다. 세계 유래를 찾기 힘든 선거법 87조-사회단체 선거개입 금지조항은 시민의 힘으로 철폐되어야 한다. 우리는 참여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사회단체낙선운동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연대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전국 2500만 유권자들의 자발적 정치변혁운동은 그 시작부터 낡은 정치권의 권위주의적 독단과 낡은 편견에 부딪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우리의 정당한 참정권 회복운동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다. 오늘 안양의 9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결성한 2000총선 안양시민연대가 변화한 시대와 성숙한 유권자의 편에 서고자 한 것이 불법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법정에 설 용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최대한 법의 권위를 존중할 것이며 총선이 시작되는 그 날까지 낡은 선거제도의 변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00년 총선은 정치개혁의 시작이다! 이제 시민의 힘으로 정치를 바꾸자.

2000. 1. 27

2000 총선 안양 시민연대

안양YMCA/안양YWCA/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안양시민대학/KYC안양군포의왕지부/안양내일여성센터/
안양여성의 전화/안양여성회/안양지역시민연대/경기중부노총문화정보센터

- 2000총선 안양시민연대와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2000총선 안양시민연대와 서명운동, 시민홍보활동을 함께할 시민실천단을 모집합니다.
- 2000총선 안양시민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후원을 받습니다.
후원계좌번호 : 국민은행 : 209-01-0889-662 총선연대
농 협 : 136-12-570032 안명균(안양총선연대)
- 16대 총선출마 예정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사무국 :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987-28 2층 환경운동연합 431-081 T : 458-9070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은 홈페이지 www.ngokorea.org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2000년 총선을 낚은 정치 심판장으로! 국민주권의 축제로!

민주화가 되면 정치는 자연스럽게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21세기가 와도 정치인들은 당리당략과 이권담합에만 골몰해 있습니다. 낚은 정치는 이제 모든 국민들에게 불행을 안겨다 주는 최대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부패정치가 IMF를 불렀습니다. 낚은 정치가 유권자들을 해묵은 지역감정의 노예로 전락시켰습니다. 국민은 이제 더 이상 참고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하고 불성실한 우리의 심부름꾼들에게 한 목소리로 외칩시다. 낚은 정치 퇴장! 부패정치, 지역정치는 20세기와 함께 무대 뒤로 물러가야 합니다. 새 천년 무대의 주인은 4천만 국민입니다.

■ 유권자 행동 지침 ■

1. 부패무능불성실 정치인 66인의 공천을 반대하는 전화와 편지를 각 당 공천심사위에 보냅니다.
2. 시민단체의 선거개입을 불법으로 규정한 선거법 58조, 87조, 254조는 세계유래가 없는 악법입니다. 낙선운동 합법화를 위해 선거법 개정 서명에 동참합니다.
3. 음모론으로 유권자들을 모독하는 정치인들에게 항의전화를 걸어 아직도 정신 못차린 정치인들에게 유권자를 바보취급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4. 지역감정은 망국병입니다. 지역감정을 유포하는 정치인을 추방합니다.
5. 지역구의 공천예정자 중 부패행위자가 있으면 그 구체적 근거와 함께 총선연대에 제보해주시시오.
6. 후보자 부패전력, 납세사항, 재산신고사항, 병역사항의 공개를 촉구합니다. 국민의 기본 의무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7. 금품수수, 향응제공 정치인을 고발합니다. 돈 안 쓰는 선거가 깨끗한 정치의 시작, 아직도 돈주고 표를 살수 있다고 믿는 낚은 정치인들을 심판합니다.

**"2000년 총선,
부패정치 심판으로
유권자 혁명을
이루어냅시다."**